

금양 글로벌 경제 제재 준수 규정



목차

1. 서문
2. 경제 제재란?
3. 기본원칙
4. 거래 상대 사전 검토
5. 내부 Control
6. 신고 및 보복 금지
7. 본 정책 위반 결과

1. 서문

우리는 금양인으로서 국제무역규제준수를 우리의 행동강령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시행하는 수출입 통제, 무역제한, 통상 금지 등의 법적·경제적 제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반드시 준수한다.

2. 경제 제재란?

경제제재란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제조 등 전쟁 위협, 인신매매 등 인권 유린, 테러/범죄조직 지원, 마약 생산·밀매 등을 방지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대한민국, EU회원국과 같은 개별국가, EU와 같은 초국가연합, UN과 같은 국제기구 등이 국제규범이나 자국 규범을 위반한 특정국가/지역 /정부/법인/조직/개인 등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상업적 또는 금융적 조치를 말한다.

※ 제재의 대표적 형태

- 수출입 금지, 특정 물품이나 용역 제공 금지
- 합작 회사 운영, 투자와 같은 사업행위 금지
- 제재 대상 국가, 기업, 개인과의 자금 이체 및 송금 금지
- 자산 및 계좌 동결
- 여행 및 운송 금지 등

3. 기본원칙

(1) 경제제재 준수

금양의 구성원은 금양에 적용되는 경제제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거래 전 정책준수 여부 점검 및 이행

금양 구성원은 모든 거래에 앞서 본 정책이 제시하는 각종 점검 및 이행사항을 수행해야한다.

(3) 의심 시 거래중단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염려가 된다면, 거래를 중단한다. 이미 진행한 경우에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4) 전문가의 조력

만일 본정책의 모든 사항을 점검 및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스럽거나 또는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글로벌 경제 제재 정책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4. 거래 상대 사전 검토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 내용과 거래 상대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경제 제재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한다.

- (1)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 내용이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대다수 경제제재는 포괄적 제재 대상국가의 정부(재외공관), 국적자, 소재기업 (모든 해외 자회사 포함)과의 상품/자본 거래 전반을 금지
 - 포괄적 제재 대상국가는 변동 가능하므로 거래 시 마다 확인 필요

- (2) 거래 상대방이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포괄적 제재 대상국가와는 관련이 없더라도 거래 금지 또는 사전허가 대상에는 특정 집단이 포함될 수 있음 (기업, 국적자, 단체 등)
 - 제재대상자는 통상 List로 관리하며 거래 전 List 확인 반드시 필요

- (3) 거래 상대방의 거래업체는 제재대상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한다.
거래 내용이 포괄적 제재 대상 국가와 연관이 없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자는 아니더라도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 및 서비스의 모든 생산 프로세스 중 일부과정이라도 제재 대상자가 관여한 경우, 혹은 간접적으로 제재 대상자에게 제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한 경우 경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거래 상대방 확인서 등 수취필요)

- (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제재 대상 리스트를 확인 및 관리한다.

- 포괄적 제재 대상국가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목록 (미국 재무부)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

- (5) 위의 포괄적 제재 대상 국가 외에도 UN 등 국제기구나 국가들은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제재 대상자라고 한다. 제재 대상자는 개인, 법인, 기타단체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제재 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목록

- UN 제재 통합 검색 리스트
<https://scsanctions.un.org/search/>
- 미국 제재 통합 검색 엔진
<https://legacy.export.gov/csl-search>
- EU 제재 통합 금융 제재 명단
<https://webgate.ec.europa.eu/europeaid/fsd/fsf>

(6) 거래 상대방의 거래 업체가 경제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거래 내용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거래가 경제 제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금양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은 포괄적 제재 대상 국가와 연관이 없거나 제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거래의 원자재 공급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판매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중 단 하나라도 제재 대상이 관여하였거나 제재 대상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경제 제재 위반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 공급되는 모든 과정에서 경제 제재 대상인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실사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 제재와 관계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내부 Control

(1) 기본 검토 절차

- 사전 검토 결과 포괄 제재 대상 국가 또는 제재 대상자일 경우
 → 즉시 거래 중단
- 해당 없을 경우
 → 거래 가능, 경제제재 준수 약속서 징구, 의심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거래 중단 및 관리 부서 고지

· 포괄적 제재 대상 국가에 해당되더라도 경제 제재 중에는 인도적인 차원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둔다. 그러나 일단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인허가 등 특별한 조건이 부과되는지를 명확히 확인 후 다시 거래를 추진 또는 재개하여야 한다.

(2)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치사항

사전 검토 결과 해당 거래가 제재 위반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경제 제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는 다음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거나 다음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서약서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한다.

- 경제 제재 위반 사실이 없으며 당해 거래물품 또는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 포괄적 제재 대상국가나 제재 대상자와 관련 사실이 없다는 확인
- 거래 전 과정에서 경제 제재를 준수하였으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약속
- 경제 제재 위반 시 금양의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약속

금양 구성원이 경제 제재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한다.

- 제 3자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누락하여 사전 검토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행위
- 검토 결과 위험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 경제 제재의 적용에 대한 회피를 시도한 경우는 물론, 우리의 거래 상대방이나 제 3자가 회피시도를 한 경우 비록 금양은 그럴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금양도 제재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6. 신고 및 보복 금지

- 본 정책 또는 경제 제재 법규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염려가 있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관리 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누구의 담당 업무인지를 떠나 금양 구성원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다.
- 금양은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차별, 협박도 금지한다.
- 금양이 보호하는 대상에는 본 정책 위반 사실이나 혐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 신고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 신고에 협조한 사람,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를 보조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 금양은 본 정책 위반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실을 선의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위반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7. 본 정책 위반 결과

- 본 정책의 위반은 행동강령 및 고용계약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징계 사유로 해고 등을 야기할 수 있다.
- 거래 상대방의 본 정책 위반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또는 손해 배상 등 사업관계 종료, 향후 사업적 기회 박탈 등 막대한 사업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본 정책의 위반과 더불어 경제제재의 위반은 당해 법인과 모든 금양 구성원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의 경제 제재 위반은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직접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와의 사업적 관계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금양은 국제 무역 규제 준수를 사업적 이익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